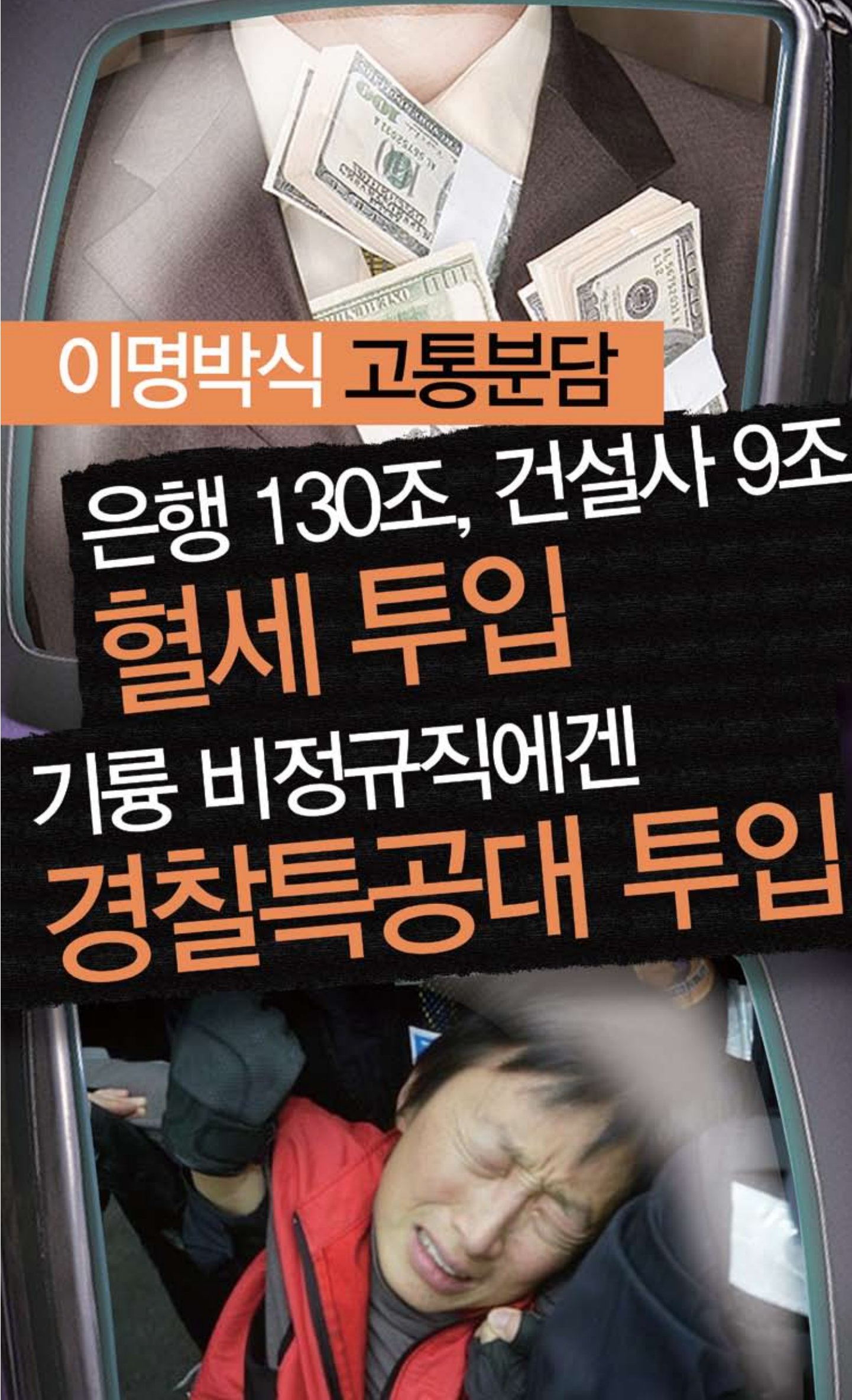




이명박식 고통분담

은행 130조, 건설사 9조 혈세 투입

기륭 비정규직에겐 경찰특공대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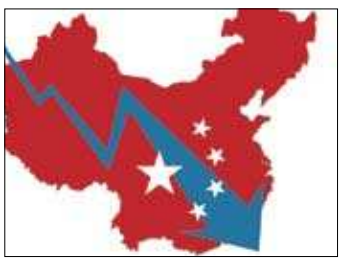
이명박의
부자맞춤형 위기 대책과
투쟁의 요구들
3~4면



국가 개입 정책의 신화와 현실
- ‘뉴딜’의 사례
8~9면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장하준 ①
5면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인터뷰
16면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중국 / 이탈리아 / 그리스
10면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3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7면

고시원 살인의 비극
2면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http://www.
resistcandle.com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게 없기 때문”

—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지프 스티글리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제의 헤지펀드’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 이 별칭이 오랜만에 적절하고 불운해 보인다.”

— <파이낸셜타임스>

“그럴 바에는 애당초 ‘악의 축’ 소리나 하지 말 것이지, …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김정일에게 웃음을 보내는 따위의 행위는 어느 면에서 우리를 화나게 한다.”

— 조지 부시에게 화가 난

<조선일보> 김대중

“트루먼의 원폭 투하는 많은 생명을 살렸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로 약 13만 명이 죽었으나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

— 핵폭탄을 찬양하는 극우의 조갑제

“해결책? 그래, 나 해결책 있어. 니들 내가 돈 줄 테니 전부 다 북한으로 개 94일을 굶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음식 다 먹고 굶었다고 한 거 다 안다.”

— 기동전자 기획이사 김영창,

단식한 노동자들에게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 시위 … 사진을 보니까 한총련, 민주노총 등 시위꾼이 전부 (농민 시위의) 뒤에 있다.”

— 배후론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최병국

“구본홍 씨가 괜히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다. 한 후배가 ‘차라리 결혼 축하 화환 화형식을 하는 게 어때냐’고 제안해 그럴까 생각 중”

— ‘사내 커플’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YTN 이선아 기자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정병호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물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과 똑같이 빈곤, 차별, 냉대를 겪고 있던 무고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때문에 주류 언론은 주되게 범인 개인의 성격 이상을 탓하고 있다. 가해자가 인형뽑기 게임에 보인 집착, ‘물병과의 대화’ 등을 볼 때 “성격에 문제가 있는 반사회적 인물인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일종]”의 범죄라는 것이다.

물론 무고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범행 가해자가 심각하게 왜곡된 사고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왜곡된 심성을 낳은 환경은 결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 정상진은 음식 배달을 하며 받은 적은 월급으로 고시원 월세, 휴대전화비, 하지정맥류 치료비, 벌금 등을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을 비판했다.

그런 현실은 오늘날 비정규직화와 실업 증가에 던져진 수백만 청년들의 현실이다. 물론 억압과 소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토양 속에서 비뚤어진 심성을 키우게 된다.

주류 언론들도 최근 불황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무시하지 만은 않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징이 “자신의 환경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질타한다. 마치 가해자가 보인 로또 당첨 변호에 대한 집요한 의심을 반사회성의 근거처럼 말하기도 한다.

까맣게 탄 사건 현장 — 야만적 체제가 낳은 비극의 희생자는 밑바닥 기층 민중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비뚤어진 심성은 그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헛된 개인적 방식에 집착한 것에서 비롯했다. 그는 로또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로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불운’을 부정하고 싶은 심정에서 의심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세상이 무시’하는 자신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위안을 찾으려 했던 행동들이다.

사회적 해결책이 아닌 개인적 위안에 집착하다보니, 삶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자존심을 추스르기 위해 온갖 망상에 사로잡히게 됐을 것이다. 결국 그는 분노와 좌절감을 외부 세계를 향한 무차별적인 적대감으로 갑작스럽게 드러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체제 자체가 낳고 있는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은 채, 주류 언론들처럼 이런 개인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속에 “숨어 있는 폭탄”이라며 경고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경계심만 강화할 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미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 임계치를 넘어섰다.”(표창원 경찰대 교수)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을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소외로 내모는 체제 자체를 근본에서 수술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은 계속될지 모른다.

경제 불황 시기에 이런 비극을 방지하려면 복지 확충과 청년 실업 해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해결책은 온갖 부를 독차지하고 합법·타법적인 범죄를 일삼으면서 그 고통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자들의 부와 권력을 침해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파렴치한 강부자1 · 2중대의 진흙탕 싸움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인 지난 3년간 무려 1백 21억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을 불법 수령하면서 많게는 수억 원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해 온 것이다.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강남구 거주자의 직불금 신청이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세 감면 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파렴치한들 때문에 정작 직불금을 받아야 할 농민 7만여 명이 직불금 1천68억 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그리고

억울한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고 고 관청에 신고라도 하면, 땅 주인들이 농민들이 소작하는 땅을 빼앗기 일쑤였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봉화 파문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쌀 직불금 제도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내가 현직 검찰이면 모두 수사할 것”이라던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밝혀지자 “한나라당 의

원들이 순진하잖냐”며 얼버무리고 있다. 이봉화 외에도 한승수, 강만수, 최시중, 김황식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MB맨들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등골

‘강부자’ 2중대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김대중 비서관의 직불금 불법 수령이 밝혀졌고, 민주당 의원 11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데 둘째 가라면 서러워했던 정당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사건의 폭발력을 직감한 감사원은 실정법을 어기며 노무현에게 사전보고를 했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는커녕 관련 자료를 폐기해 버

렸다.

결국 엄청난 대중적 반감에 밀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조사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강부자’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한 추징(2007년 양도세 감면액 1조 5천억 원) 대신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게 수령액의 2배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피땀을 갈취하며 호사스런 생활을 해 온 ‘강부자’들은 반드시 그 짓값을 치려야 한다. 진상을 낱알이 규명하고 파렴치한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와 농업 말살 정책 속에 짓눌린 농민들을 위해 국가가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고 쌀을 사들이는 추곡수매제 등을 부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박건희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무려 1천억 달러(1백30조 원)를 동원해 은행들의 달러 차입을 보증하기로 한 데 이어 9조 원가량을 건설사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IMF 위기 이후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하고,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며 매년 수조 원씩 돈을 벌어 온 은행들은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 건설사들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 분양가를 마구 높이며 엄청난 폭리를 취해 오다가 거품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속에서 은행과 건설사 CEO, 땅부자, 투기꾼 들은 수십억 원의 연봉, 스톡 옵션, 고수익을 누리며 온갖 호화 사치를 일삼아 왔다. 그러면서 일부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 먹었다.

그런데 ‘자유시장주의’를 말하던 이명박은 기업주와 투기꾼 들이 멋대로 투기와 돈놀이를 하도록 돕다가, 이들이 파산하려 하자 막대한 서민 혈세로 이들을 구제하려 한다. 민주당은 이런 대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반면 법인세·소득세·종부세 감면으로 재벌·부자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 줬고, 이 덕에 이명박은 매년 2천7백만여 원의 혜택을 받아 고위공직자 중 감세 혜택 1위를 기록했다. 재산을 상속할 때도 51억 원을 벌게 됐다.

한편, 은행과 건설사의 투기 실패가 낳은 피해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저임금을 만회해 보고자 펀드에 넣은 돈은 반토막이 나고, 어렵게 구한 집의 대출금과 높은 이자 갚기에 정신없고, 점심 값도 부담스러워 편의점 삼각김밥 매출이 급증한 것이 서민의 현실이다.

밀바닥 계층은 더 처참하다. 최근 2평짜리 고시원에서 구겨져 살다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고시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노동자·서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을 생각도 없다. 아니,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서민을 벼랑 밑으로 밀어 버리는 게 이명박의 대책이다.

이미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강요

해 온 이명박은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제 은행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주문하고 있고, “죽으라면 죽겠다”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철탑 농성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더구나 재벌·부자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이명박의 대책은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부실은 사라지지 않고 옮겨진 것일 뿐이며, 수출 감소, 막대한 외채와 가계 부채, 세계경제 위기 등의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번 “마지막 카드”조차 실패하면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막대한 세금은 은행·건설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한다.

파산하는 은행·건설사는 국유화하고 이들의 이윤을 회수해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와 주거를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고 경제 위기 속에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요구들을 위한 대중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강동훈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건설사에 대출해 준 돈이 올 6월 말에 48조 원 정도로 1년 반 사이에 85퍼센트나 급증했는데, 정부가 9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것은 미봉책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가망도 없는 부동산 거품 유지에 목매달며 금융기관·건설사·부유층에 돈을 퍼붓는 사이 서민 주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부도 위험 운운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낮추지 않아 노동자·서민은 집을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국민임대주택을 8만 가구로 축소했다.

뉴타운 개발도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고 있다.

뉴타운 지역 주민의 70퍼센트가 넘는 세입자들도 대부분 강제 퇴출되고 있다. 최근 왕십리·상도동 등에서는 철거업체 용역깡패가 경찰의 비호 아래 세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서울시 발표로도 최소 14만 명이 뉴타운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을 전망이다.

텅 빈 미분양 아파트의 한 편에서 수많은 서민들이 고시원·지하방·옥탑방을 전전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

대안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건설사와 부유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엄청난 투기적 수익을 누리다 거품이 터져 파산하는 건설사들은 국유화해서 노동자·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용해야 한다.

공개토론회

맑스주의는 현 세계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연사 이정구

경상대학교 경제학 강사

10월 29일(수) / 7시 / 연세대 광복관 113호 / 문의 010-2263-1106

10월 30일(목) / 6시 30분 / 중앙대 문과대 2716호 / 문의 010-3163-1673

연사 장시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책세상) 저자

11월 12일(수) / 7시 / 부산대 (주후공지) / 문의 010-8367-0610

11월 14일(금) / 6시 30분 / 건국대 상하관 316호 / 문의 011-1731-2177

참가비_강연당 2천 원

주최_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노동자 ·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 · 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장호중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지고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크게 올라 노동자 · 서민이 고금리와 물가 폭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월 5.9퍼센트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9월에도 5퍼센트 대에 머물렀다. 특히 주요 생필품 물가는 최대 80퍼센트 이상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밀가루 값이 89퍼센트나 오르게 이어 이번 달에도 쌀(16.4퍼센트), 밀가루(2.9퍼센트), 삼겹살(36.9퍼센트), 마늘(50.5퍼센트)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다.

반면 주요 대기업들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분과 외채 이자 증가분을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는 등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국제 유가가 절반으로 폭락하는 동안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좀체 내리질 않고 있고, 주가 폭락을 막겠다며 금리를 조금 낮췄지만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화수하기 시작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고, 이는 물가 폭등을 부추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주류 언론조차 '정부가 물가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과 기업주들의 이윤 추구 자체를 가로막아서라도 고금리 · 고물가의 이중고를 겪는 노동자 ·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자 · 서민의 실질 소득을 늘려 현재의 실질 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임금 보호,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자

최미진

경기 침체가 대량 실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말 15~34세 인구 중 1백만 명에 육박하는 6.9퍼센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무(無)업자였다. 통계상 실업 이외에도 '구직 단념자'와 주당 근로시간이 26시간 이하인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4백만 명에 육박한다.

더구나 지난해 말 취업자 증가 수는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 하반기 주요 은행 입사 경쟁률은 최대 2백 대 1을 넘었다. 제2의 IMF 한파가 곧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취업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말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떠돈다.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들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줄인다. 결국 대량 실업은 무계획적 축적과 거품 키우기로 위기를 부른 자들이 책임져야 할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 실업 사태는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명박은 공기업 인원 감축, 은행 노동자 임금 동결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부 장관 이영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따라서 이명박과는 전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왜 부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엄청난 돈은 노동자 · 서민을 살리는 데는 쓸 수 없는 것인가? 왜 다른 한편에서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자존감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나?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려면 대량 해고를 부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부자들의 빚을 갚아 주는 데 사용되는 엄청난 돈은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

직장폐쇄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들은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펀드 손실 손실의 주범들이 책임져라

김문성

월급의 절반 이상을 펀드에 붓던 젊은 직장인들, 퇴직금을 펀드에 몽땅 넣거나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을 펀드에 넣어 온 할아버지 · 할머니.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돈으로 펀드에 가입해 사고육비를 감당해 보려던 주부들.

이들의 희망이 펀드와 함께 추락하고 있다. 올해 개인 펀드 손실액만 51조 7천억 원이다. 수익률 플러스인 펀드가 단 하나도 없다.

돼지저금통까지 펀드 광풍에 끌어들인 건 투기 거품을 조장하고, 거품 가격에 주식을 되사 줄 사람을 기다리던 투자 자본들이었다.

사실 펀드 손실 자체는 금융기관에게 피해가 없다. 판매와 취급 수수료가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돈이다. 다만, 수익률 하락으로 수탁금이 줄어들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거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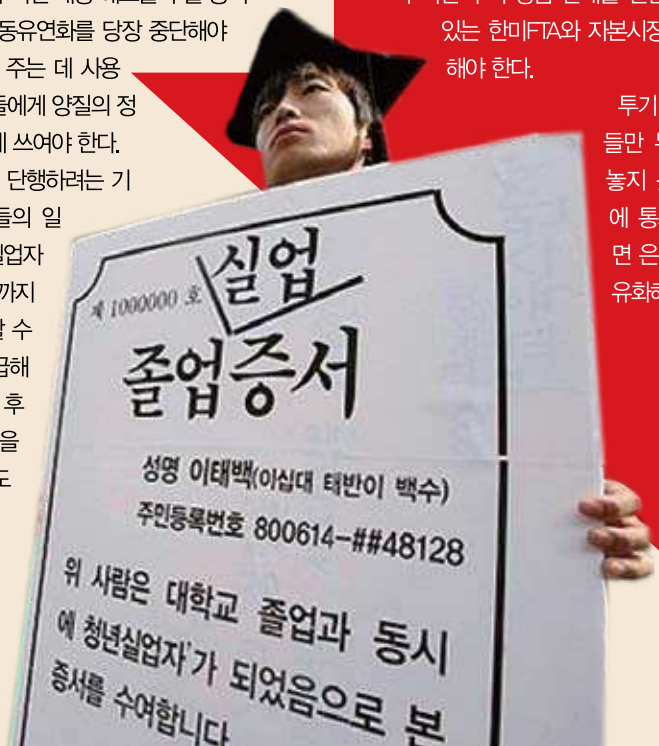
그래서 중국 펀드에 '물빵'하다 올 초 위기에 몰린 미래에셋은 "주가가 하락하는 지금이야말로 투자 적기"라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투기상품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면서 '펀드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펀드 투자를 장려해 온 정부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 위기로 인한 서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와 자본이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 투기 상품 자체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 펀드보다 더한 투기 상품 판매를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투기 큰손들이 펀드 개미들만 누더기 시장에 남겨놓지 못하도록 자본 이동에 통제를 가하고, 필요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국유화해야 한다.



기획 연재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항의 촛불>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주요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김용욱

장하준은 자신을 “빈국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발경제학자로 소개한다.

장하준은 주요 저작에서 과거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선진국이 오늘날 빈국에 자유무역과 탈규제를 강요해 발전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대다수 반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입장과 일치하며, 상상 속의 시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데서 장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장하준이 때로 너무 단순하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갈처럼 구분하지만, 오늘날 서브프라임모기지과 각종 파생상품이 불러 온 위기를 보면, 자본의 ‘자유로운’ 투기 활동이 초래할 해악에 대한 그의 지적이 옳았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다수 반신자유주의 사상가들처럼 장하준에게도 신자유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특정한 자본 분파(주로 ‘초국적 금융자본’)가 저지르는 온갖 해악(탈규제, 민영화 등)에 대한 반대다.

장하준은 “경쟁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시장 경쟁이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계획

장하준이 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뒤 돌연 꼬리를 내리는 것은 그가 자본주의 시장을 뛰어넘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 케인스도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 바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알지 못한다.”

장하준은 시장경제의 대안인 사회주의가 시장 경쟁을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스탈린주의 체제의 낭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중앙 집중적인 계획과 포괄적인 국유화를 통해 모든 경

쟁을 억제하려던 시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그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토론하고 하면 지겨워서 안”한다는 엘리트주의적 근거로 거부한다. 대안은 “통제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을 논의할 때 장하준은 어떤 국가 통제가 필요한지 상세히 언급한다. 그는 빈국이 ‘선택적 산업 정책’을 통해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금융자본’(또는 주주 자본, 투기 자본)의 만행을 억제하고,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하준은 이런 국가 개입이 세계시장의 힘을 빌리는 방향으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려면 개발도상국들은 … 외화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 대부분[의 외화]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여야 한다. …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시장과의 관계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빈국들이 부딪치게 되는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한 나라가 추구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나라가 동시에 추구하면 — 즉, 경쟁이 보편화하면 —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장하준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박정희 모델이 성공을 거둔 것은 운 좋게도 세계시장에 편입된 소수의 제3세계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

중국의 대공장 — ‘통제된 시장경제’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에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세계시장에 공산품을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자. 전 세계적 수준에서 엄청난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1990년대 빈국들이 커피를 대거 수출했다가 50퍼센트의 가격 폭락에 직면한 것이 좋은 예다.

‘중국 위협’

더 결정적 예로,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 정책보다는 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성장한 사례고, 일부 국가들은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수출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은 서방 시장, 특히 미국에서 중국 상품에 밀려났고, 심지어 선진국들도 중국 상품과의 경쟁 압력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많은 나라 지배자들이 ‘중국 위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단순한 위협용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의 성공은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에서 빈곤율이 크게 하락한 시기는 수출 붐이 폭발한 1990년대 중반 이후가 아니라 주로 국내 소비 붐에 의존해 성장했던 1980년대 초·중반이었다. 10퍼센트 이상의 고도성장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는 오히려 절대 빈곤자의 수가 늘고 있다.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에게 양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도 때때로 이런 문제를 인식한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 발전에 성공한 국가들 — 예컨대 한국과 가까운 미래의 중국 — 은 내수 중심으로 가야 한

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키우려면 당연히 노동자·서민의 소비가 늘어야 하고, 이것은 때로는 엄청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한 전문가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인 5퍼센트로 만들려면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45~50퍼센트에서 65퍼센트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려면 자본가들의 이윤을 엄청나게 깎아 먹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볼 때, 자본가들은 설사 이런 변화가 축적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더라도 알아서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오직 아래로부터 엄청난 투쟁이 있을 때 약간 양보를 할 뿐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내수 진작을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것은 중국 경제를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장하준의 주장처럼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며, 이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된 요구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뛰어 넘는 대안을 거부하고, 단지 그것을 규제하고 이용하는 것에 멈춰서는 전 세계 빈민이 끔찍한 가난과 때 이른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 세계시장은 지난 30년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규제된 세계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논리를 폐지한 전 세계적 민주적 계획 경제다.

.....
다음에는 현재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장하준이 한국 경제에 제시하는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경쟁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전지운

세계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적 경쟁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친시장 우파들은 경쟁을 찬양하며 일제고사 등을 지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얼마 전 “올림픽 금메달은 찬양하면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경쟁[으로] 가득찬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아이들에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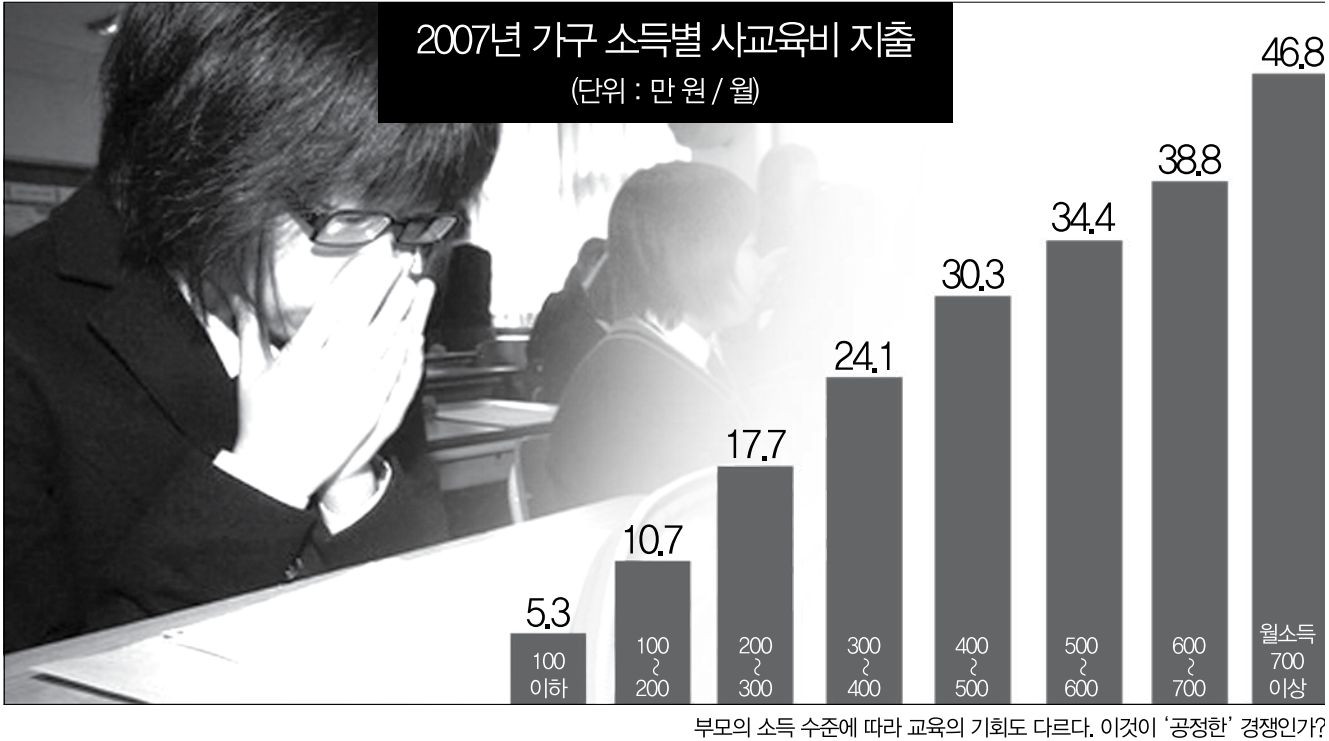
경쟁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다. 경쟁의 압력 속에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생산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설비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도록 내몰린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선’으로, 경쟁력을 낮추는 것—노동조합, 파업, 고임금, 안정된 고용—은 ‘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쟁은 여러 가지 비극을 낳는다. 당장 교육에서 입시경쟁의 강화는 친구들이 서로 노트를 숨기고, 몰래 친구의 노트를 찢게 만들었다. 경쟁에 찌들리고 뒤처지는 학생들은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청소년의 58퍼센트가 ‘자살을 생각했다’(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 결과)는 통계는 입시경쟁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도 “경쟁은 때로 각박하고 남을 밟고 넘어서는 작업이다. 비인간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쟁을 둘러싼 신화를 만들어낸다. 즉 ‘경쟁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집 옆방에 거지 식구가 살았어요. 우리 집은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굶기가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네 식구들은 매일 아침 밥을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 우리는 다 부자가 됐는데 거지네 식구는 계속 거지로 살았어요.”

이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하고 보상받는다는 ‘개미와 벼지이’의 신화는 항상 되풀이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현실에는 뽀 빠지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개미’와 부동산·주식 투기로 앉아서 돈을 버는



‘벼지이’들이 가득하다.

몇 년 전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소녀의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신화를 파괴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5퍼센트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공정한 경쟁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2백 명의 재산이 가장 가난한 20억 명의 재산과 같게 만들었다.

오로지 이윤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쟁은 그 과정에서 배제·억압·착취가 필요하며, 그 결과와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될 수밖에 없다.

낭비와 비효율

자본주의적 경쟁은 어마어마한 낭비와 비효율 투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아침 출근길 지하철 선반 위를 뒤덮은 온갖 광고지와 무료신문 등을 보라.

여기에 낭비되는 돈만 복지에 돌려도 수많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힘겹게 폐지를 줌과 팔아서 살아가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쟁은 부패와 범죄의 뿌리

이기도 하다. 맑스는 “10퍼센트의 이윤이 보장되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자된다. 50퍼센트라면 대담무쌍해지고, 1백 퍼센트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할 준비가 돼 있으며, 3백 퍼센트라면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고 자본의 생리를 지적했다. 축산업계의 이윤 경쟁과 광우병, 중국발 멜라민 파동도 이것을 보여 준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루지야에서 벌어진 비극도 자본주의적 경쟁의 결과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경쟁은 군사적 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주들의 무정부적인 경쟁은 지금처럼 경제 위기를 낳는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은 자본주의가 ‘경쟁’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체제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특정 생산양식(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태를 역사를 초월한 고정된 인간본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은 수렵, 농경, 산업에 이르기까지 먹고살기 위해 협력해서 노동하며 사회·언어를 발전시켜 왔다.

인류학자들의 조사를 보면 북아메리카의 수우족은 수확 문제를 서로 보거나 협력해서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쟁은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자본주의에서도 경쟁과 동시에 협력이 요구된다. 현대차의 일관생산 공정은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경쟁을 완화하고 끝장내기 위한 ‘경쟁’을 달고 다닌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피억압 민중과 지배계급 사이의 경쟁, 즉 계급투쟁이다.

이런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 고용 안정, 입시경쟁 완화 등을 이룰 때 자본주의적 경쟁이 낳는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이런 투쟁은 노동 대중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체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축구에서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 체제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특정 생산양식(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태를 역사를 초월한 고정된 인간본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은 수렵, 농경, 산업에 이르기까지 먹고살기 위해 협력해서 노동하며 사회·언어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 업종, 성별, 인종에 따라 분열하고 경쟁할 때 더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을 분열·경쟁시키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시도에 맞서 싸우며 이명박과 기업주들에 맞선 단결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진짜 재생에너지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다. 게다가 EU와 중국의 2010년 목표 수준(11퍼센트)을 이틀보다 20년 늦은 2030년에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회기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린홈 1백만 개” 건설 계획은 경제에 이어 온실가스도 부동산으로 잡겠다는 식이다. ‘그린홈’을 누구에게 얼마에 제공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강부자용 집을 짓겠다는

》7면으로 이어짐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세 번째다.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김용욱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항과 반란도 낳았다. 그런 반란이 가장 진척됐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 30년 독재를 끝장냈다.

수하르토는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지도자 수카르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공산당 활동가와 사회 운동·소수 민족 운동 단체 활동가 2백만 명을 학살하며 집권했다.

수하르토는 냉전 시대 친서방 노선을 걸으며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미국 시장에 자국 상품을 대거 수출할 수 있었고, 일본 자본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이 정점에 달한 1980년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6퍼센트를 넘었다.

30년 독재

경제 성장의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 고위 관료와 그들과 결탁한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수하르토 가족들은 공공 사업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한 때 그들의 자산은 4백60억 달러에 달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불평등한 체제를 뒤흔들 힘을 가진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약 8천6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의 공장과 사무실에 고용돼 있었고 그들 중 2천만 명은 주요 도시의 대형 작업장에서 일했다.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른 동아시아 경제들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지배자들은 수출 시장의 지속적 팽창을 예측하고 엄청난 외자(중 상당액은 단기 부채였다)를 도입해 투자했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것이 대규모 고정자본 투자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과 결합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 결과 1997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해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임금 체불과 실업 문제가 발생했다.

IMF의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1998년 초 IMF의 요구에 따라 16개 부실 은행이 폐쇄되자 화들짝 놀란 국제 투

기꾼들은 순식간에 돈을 빼갔고 외환위기가 폭발했다. 1998년 상반기에 매달 노동자 2백만 명이 해고됐고 실질임금이 거의 50퍼센트나 줄었다.

수하르토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 그는 1998년 3월 자신이 새 대통령으로 ‘재선’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듣고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찰과 충돌했다. 이것은 도시 빈민들에게 큰 자극을 줬고, 일부 대공장 노동자들도 급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하르토가 IMF의 요구인 연료 가격 70퍼센트 인상을 발표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초기에는 분노가 소수민족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분명, 화교 자본가들이 인도네시아 자산

의 70퍼센트를 소유했지만, 대다수 화교들은 평범한 노동자·서민이었다. 수하르토와 측근 인사들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화교들에게 떠넘기면서 공격을 부추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초점은 점점 수하르토와 그 측근들로 옮겨갔다. 물가인상에 항의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영문 주간지 <인사이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부패한 관료들이 궁지에 몰렸다. 농민들은 수하르토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았다. 각종 정당·노동조합·반부패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IMF와 서방 지배자들은 당황했다. 수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 준 부자들의 세금 75조 원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 하겠다는 총 금액의 25배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서슴없이 지갑을 열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들은 외면한 채, 핵발전 확대와 시장논리, 규제완화, 반생태적 중복투자로 가득찬 이명박의 ‘종합계획’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인류 전체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아래로부터 투쟁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의 책무

정부가 대중교통을 지금보다 늘리고 요금을 인하한다면 승용차 이용은 더 많이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 준 부자들의 세금 75조 원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 하겠다는 총 금액의 25배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서슴없이 지갑을 열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들은 외면한 채, 핵발전 확대와 시장논리, 규제완화, 반생태적 중복투자로 가득찬 이명박의 ‘종합계획’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인류 전체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아래로부터 투쟁이 불가피하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국가가 경제에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니 존스는 뉴딜 정책이 대공황 시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4호에 실렸다.

지난달 벌어진 일들로 인해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가 뜨거운 논쟁점이 됐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난 30년 동안 지배자들 사이에서 자유시장은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었다.

물론 현실은 그와 상당히 달랐다. 국가는 무역 협상을 하거나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미국 정부가 거대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장의 지배는 옛말이 됐다.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유화”로 묘사했다.

그 뒤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 주도대 대규모 규제책이 나왔다. 오늘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엄청난 개입을 지켜본 몇몇 논평가들은 이것을 1930년대 미국 정부의 뉴딜 정책과 비교하곤 한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3년부터 추진한 뉴딜 정책은 1929년 월가의 파산과 뒤이은 대공황에 국가가 대처하라는 대중의 요구에 호응한 것이었다.

경제사학자 겔브레이스는 자신의 책 《대폭락 1929》에서 경제 위기 직전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미국 중간계급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란 확신이 가득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 상황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니다. 위기 직전 6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산업 생산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새 차 생산량이 약 3분의 1가량 떨어졌고 기계·석탄·철강 생산도 곧 같은 운명을 맞았다.

기업은 비생산적 지출(예컨대 광고)을 줄이려 애썼지만 그런 노

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대공황 3년 동안, 전체 노동자 3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빠졌고 세계 무역량은 3분의 1로 줄었다.

1933년, 루스벨트는 총투표자 중 57퍼센트의 지지를 얻고 6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기는 압도적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경제 회생 프로그램으로 뉴딜 정책을 채택했다.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것을 보증하게 했다. 국가산업 부흥법의 일부로 가격 통제를 위한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실업자 약 2백50만 명을 수용할 워크캠프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병원·학교를 짓고 하수처리장·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려고 만들어진 공공건설회사의 일부였다.

뉴딜은 또 향후 30년 이상 민주당의 든든한 원군이 되는 자유주의자·노동조합·흑인민권운동단체들의 연합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은 이른바 ‘황견(Yellow Dog) 계약’—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의 고용 계약—이 금지됐고, 국가산업부흥법은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을 규제했다.

이런 조치 덕분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권리를 얻었다. 1933년에서 1935년 사이 정부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보조금 지급에 2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다.

이런 조치들은 일부 지배자들의 반발을 샀다. 뉴딜 정책을 반대하는 우익 공화당원들과 남부의 인종차별적 민주당원들은 ‘보수대연합’을 만들었다. 이 연합의 지도자인 로버트 태프트는 뉴딜 정책이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대기업

그러나 루스벨트는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윤 체제의 돌도 없는 친구”로 소개하곤 했다. 루스벨트는 확실히 “미국의 전통을 날려 버리길 바라는 경제 귀족들”을 직접 공격했다. “그들이 불평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민주주의는 미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결코 자본주의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민주당과 이를 지지하는 대기업들은 학교·병원·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공황 시기, 이 작업에 엄청난 실업자들이 한몫에 동원됐다.

루스벨트는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관심을 쏟았다. 예컨대, 숙련노동자 임금을 깎고, 우체국 기금을 대폭 줄이고, 공무원들을 해고해 임금 지출을 1억 달러 가까이 줄이는 식으로 말이다.

루스벨트의 전기 작가 프랭크 프리델이 정리한 것처럼, 이것은 “1933년 봄의 몇 안 되는 예외이거나 우익을 달래려는 배신적 타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핵심이었다.”

그럼에도 뉴딜 정책 기간 동안 자신감이 커진 미국 노동자들은 친노조적 법들을 활용해 파업 등 자신들의 투쟁을 더 전진시켰다.

1933년의 파업 물결은 미니애폴리스 같은 도시들에서 거대한 계급투쟁이 분출하는 데 자양분이 됐다.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아메리카공산주의자동맹의 핵심 활동가들이 트럭 운전수들의 파업인 ‘텀스터 봉기’를 이끌었다. 노동자들은 필수품 공급을 통제했고 경찰 공격에 맞서 민병대를 꾸렸다. 이 파업은 톨레도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에서 투쟁이 벌어지게 자극했을 뿐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회의(CIO)의 창립을 도왔다. 당시 CIO는 좀더 보수적인 미국노동총연맹(AFL)의 협소한 직능인조합적 태도에 반대해 산업

프랭클린 루스벨트—그의 뉴딜 정책은 미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간 구분을 뛰어넘어 조합원을 모집했다.

루스벨트는 이런 파업 물결을 잠재우고 싶었지만 1936년 재선에 성공하려면 노동조합의 지지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 대기업주들은 노동자들 사이에 새로 번지기 시작한 전투성에 겁에 질린 나머지 루스벨트에 대한 지지를 돌려싸고 분열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친노동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6년 대선에서 루스벨트가 거둔 승리는 심지어 지난 대선 결과와 왜소해 보일 만큼 엄청났다. 총투표자 중 약 6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고 메인 주와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했다. 이제 그는 더는 친노동자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파업 파고에 맞서 행동하길 거부했고, 경찰과 국토방위대를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실패한 것이다.

작가 아트 프라이스가 언급했듯, “뉴딜 정책은 조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대중 행동의 압력으로 인해 온건한 개혁이 실시된, 아주 짧은 시기였음이 분명해졌다.”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한 것은 다름 아닌 제2차세계대전이란 대살육전이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엄청난 군비 지출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됐다.

겔브레이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20세기 미국 경제는 수없이 많은 각종 사기꾼들을 환대했다. 그런 사기 행각의 오랜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기업의 도둑질이 최고조에 오른 시기였다.”

많은 논평가들은 오늘날 위기를 일종의 “불량 자본주의”가 빚어낸 결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진실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위기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

파업 승리에 환호하는 플린트의 GM 노동자들—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노동조합 관료는 파업이 금세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급진 좌파들의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투쟁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전투적 전술은 무시당했고 계급 투쟁의 높은 파고는 자신감을 회복한 사장들이 철강 산업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가라앉았다.

좌파 정치 단체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 1933년과 1934년, 파업을 선동하고 조직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전술로 돌아섰다. 이것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 ‘진보적 부르주아’와 동맹해야 한다는 ‘국민전선’ 전략의 일부였다.

온건한 개혁

1937년에 이르러 미국의 생산력은 결국 192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이것은 기존 노동력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실업률은 아직도 14퍼센트나 됐다. 그 다음해부터 경제 전체가 다시 침체에 빠졌다. 루스벨트는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구출하는 데

다. 그리고 체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부와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뉴딜 정책은 그 자체로는 미국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구출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노동자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되찾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 투쟁들을 발전시키는 데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버락 오바마가 그만의 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주 <타임>에 글을 쓴 우익 언론인 윌리엄 리즈 모그는 “만일 오바마가 당선한다면, 1932년 루스벨트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낙관적인 상상이 실현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전 세계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비극을 강요한다. 경제 위기에 맞서 벌어질 셀 수 없이 많은 투쟁 속에, 새로운 세대를 저항의 정치로 설득하는 활동 속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패배 앞에서 고심하는 미국 정부

사이먼 아사프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미군 총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을 재평가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군사 동맹인 나토를 휘감고 있는 심각한 비판론—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을 감안한 것이다.

페트레이어스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부 “온건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어 그들을 “부족 민병대”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말했다. “나는 확실히 적들 가능한 많은 협의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지난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기양양하게 승리 선언을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짧은 시

일 안에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영국군 신임 사령관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 3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초기 2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으스스할 수 있었다. 탈레반은 사본오열했고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핵심 요소, 즉 전쟁으로 갈라리 찢겨진 나라를 재건해 “대중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책정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은 서방 건설업자·부패한 관리 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건설된 도로를 전부 군사용이었고 학교와 병원은 지어질 기미가 안 보였다. 대신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가 수도 카불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카르자이는 대통령궁에 고립된 채 카불 밖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가 통치하는 정부는 뾰족 깊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탄받는 전정파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실험장이 됐다. 수도 카불에는 휘황찬란한 쇼 펍들과 값비싼 식당 등이 들어선 거

대 유리 빌딩들이 속속 생겨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대중은 기아로 신음하고 있었다. 만연한 부패와 빈곤은 탈레반 저항에 대한 연민을 부추겼다. 갈수록 많은 지역의 저항 조직들이 탈레반에 가담했고 탈레반은 점령군에 맞서 반격을 시작했다.

2001년과 2004년 사이 저항군의 공격에 점령군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수치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2006년, 영국군을 필두로 한 나토는 탈레반의 핵심 장악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대공세를 시작했다.

공습

초기에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한 듯 보였다.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전투기의 공습 앞에 저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그러나 곧 희생자의 상당수가 민간인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민간인 마을에 공습이 반복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대중 시위와 폭동으로 분출했다.

나토의 공습 때문에 전쟁이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까지 확대됐다.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을 공격하고 부족장들이 통제하는 파키스탄 지역으로 돌아가곤 했다.

파키스탄은 어느새 ‘테러와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됐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을 지배한 친미 군사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역을 안정시키려고 병력 수만 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무샤라프의 이런 시도는 저항군의 탈출 경로를 끊겠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군대 내의 저항만 촉발시켰다.

올해 초 그는 대중 항쟁에 밀려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새로운 민간 정부도 양쪽의 압력—미국 정부와 광범한 반전 여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긴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서 핵심적인 곳이다. 나토는 이 지역의 키버로(路)를 통해 물자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파키스탄 저항군은 나토의 물자 수송을 공격해 그것을 탈취한다. 미국은 중무장한 무인 폭격기로 저항군을 “박살”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무인 폭격기의 공습으로 죽은 시체가 마을을 뒤덮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병력 수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배 계급에게 각종 정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라크의 군대를 빼내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여러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미군 사령관들은 이 성공이 “매우 취약해서 언제든지 이전의 불안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은 결코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 바그다드와 그밖의 주요 도시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여전히 확고하지 못하다. 이라크 상황이 이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을 이동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까 봐 두려워 한다.

이런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군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현재 외국군 9만 8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상주해 있는데, 이것은 점령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40만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저항군은 카불로 통하는 많은 길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한 애초의 야심찬 계획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페트레이어스는 아프가니스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패배를 관리”하려는 이런 시도는 점령의 새로운 단계를 암시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악몽 — 경제 위기

찰리 호어

중국 경제 상황과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중요한 공업 국가일 뿐 아니라, 신용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금융시장의 큰손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 호황 덕분에 중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주무르게 됐고, 대부분을 미국 금융기관에 투자했다.

예컨대, 중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사실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주된 이유도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따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언력이 상당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우파들은 미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미국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는 복잡하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불황이 중국의 호황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달러를 쌓아 놓고 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이 보유한 부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금융자산을 투입할 더 나은 투자처가 없다.

물론 중국 투자 회사들은 아무 조건 없이 미국에 돈을 건네주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그들은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또, 중국 정부는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양보를 얻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경제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결국 미국 구제 작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제조업 호황은 높은 수준의 국가 투자와 서방에 대한 수출에 힘입은



것이였다. 전 세계적 불황은 양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경제 성장률을 줄이려 하지만,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성장률이 약간만 하락해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중국 노동자·농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엄청나게 수입했다. 올 초 전 세계 광물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거란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철강 제조업체들은 20퍼센트나 감산할 예정이고 일부 선박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았다.

이는 대(對)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을 늘려 온 국가들 —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타이완 등 — 에 큰 타격을 입힐 것

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 소비재 수출업체의 취약한 처지를 볼 때 특정 상품의 수입은 매우 빨리 축소될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 수만 개가 서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윤이 매우 적었고, 호황기에도 매년 수백 개씩 문을 닫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심화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이미 조짐은 보이고 있다. 저장성의 어떤 소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방직 업체 다섯 개 당 하나가 문을 닫았다.

정부 통계를 봐도, 지난 1년 동안 완구 제조업체 중 거의 절반이 망했다. 또, 2007년에만 신발 제조업체 중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 수치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야 어쨌든, 대량 실업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대다수 수출 산업은 주로 민공[농촌 출신 이주노동자]을 고용했다. 그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퇴직금도 없다. 사장들은 그들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1998~2002년 국영기업들 폐쇄와 정리해고가 한창일 때 거의 항쟁 수준의 투쟁이 폭발했다. 이것은 작업장 폐쇄에 반대하기보다는 약속받은 퇴직수당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중국 정부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찰리 호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가 있다.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크리스 뱌버리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크〉 편집자)

지난 금요일[10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50만 명이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마 거리는 “베를루스코니, 이제 여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겠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같은 날 밀라노와 토리노에서도 각각 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교사 8만 7천 명을 해고하려는 우파 정부에 맞서 교사와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이탈리아 학교 중 거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

버스와 전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과 연금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시위에 합류하면서 버스과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파

교사 대량해고 반대 시위에 나선 중고등학생들

업은 세 개의 소규모 독립 노조가 호소한 것이었다. 대형 노조들은 이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만 명은 이주민 마녀사냥과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최근 이탈리아는 인종차별주의 우파가 득세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제 좌파가 경제 위기가 낳은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김용욱

10월 21일 그리스에서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 연합 총파업으로 거의 모든 교통, 항공, 은행, 학교, 병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리스 노동자 5백만 명 중 1백만 명이 상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항의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스 공공 전력회사 노동자들은 회사 본부를 점거했고, 거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재선된 그리스 우파 정부는 물가상승과 경제 위기의 여파로 대중이 고통받는 와중에 대량 해고를 낳을 공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연금 삭감기도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의 투기꾼들을 구제할 세금을 확보하려고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각종 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각료들이 떼거리로 국유 토지 불법 매각에 연루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경제 위기와 집권 여당의 위기가 겹치면서 그리스 급진좌파 연합의 지지가 느는 등 좌파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왜 학교는 재미없고 가기 싫을까?

한수영

5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풀이 죽어 있는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어린 시절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은 정답만을 강요하는 시험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차츰 빛을 잃어 간다.

누구나 졸음과 실패가 반복되는 학창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이 노동자들에게 지옥철이듯이, 학생들도 일요일 밤만 되면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을 때야말로 자유롭다고 깨닫는 것처럼, 학생들도 교문을 나설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과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국가는 자본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배자들은 양질의 노동력과 그에 대한 착취가 필요하다.

학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과정을 처리해 내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그 사회의 생산력에 조응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교육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매일 교실과 운동장에서는 경쟁이 인간의 본성이며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떠들어 댈다. 경쟁 논리는 인간 능력의 우열을 구분지어 계급 차별을 정당화한다. 뛰어난 한 명이 멍청한 수백 명을 먹여 살린다고도 한다.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도 전부터 친구들을 밟고 올라서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길들여져야 한다.

‘무한경쟁’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승자는 한 줄이고, 다수가 패배자가 될 게 뻔하다. 여러 번 지다보면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잘려 나가면서 자신감이 추락한다. 혹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도 위 아래로 더 강한 경쟁자들 사이에 서게 된다.

누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에서 ‘삽질’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예인과 게임에 열광하는 건 이처럼 학교라는 지루한 터널에는 없는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중·고등학교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하는 교과서 낙서 놀이. 얼마나 수업이 지루하면 이렇게 놀이가 됐을까?

거쳐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할수록 학생들은 잘게 쪼개진다. 한국 대학의 서열화는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학생들은 진로 선택을 위한 시험에 길들여지는 동안 계급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삽질

선택받은 소수만이 장래에 이 사회를 통제할 진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머지는 전문직·관리직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갈라지고, 노동계급도 노동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되고 서열이 매겨진다. 압도 다수는 자신의 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하는 부속품

같은 인생을 선택당한다.

부유한 부모 아래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사교육비에 찢찢매는 노동계급의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 고액과외, 해외유학, 회사 경영권 양도 등 이들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학교 교육은 결국 계급사회를 합법화하고 유지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의 보수성이 문제가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순종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규율과 권위에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체벌·두발규제 같은 인권침해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단순암기식·주입식 교육은 싼값에 지배자들의 세계관과 이윤창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학생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단순히 외워야만 하는 학교가 재미있을리 없다.

“자율과 창의력”(제7차 교육과정) 도입도 생산력 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당장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노동계급에게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령 시·소설 같은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논술조차 암기 시험처럼 돼 각종 ‘정답형 참고서’가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

“자율”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장은 아침조회 끝나고 운동장 쓰레기 치울 때만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한다.

기존 사회 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학생들을 ‘봉어뺑’ 째듯 째어 내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가 재미없는 까닭은 경쟁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배제하고, 지배자들이 추앙하는 세계관이 창의력을 가로막고 규율과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개성을 발현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야 할 젊은 시절을 불안과 열등감으로 지치게 만드는 학창 시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상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이 세계의 운영 방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삽질’만 하는 ‘봉어뺑’이 되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싸울 게 아니라 꿈을 빼앗아 가는 체제와 싸워야 한다.

경제 위기로 지배자들의 사회 운영 능력이 의심받는 요즘 같은 때에 ‘노력하는 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도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0교시·야자·방과후수업 등 많은 시간을 괴롭게 보내는데도 성적은 안 오르고 취업도 어려워지는 현실에 불만 섞인 의문을 품고 도전할 수 있다.

위기를 겪는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할 때 학교에 소속된 여러 집단 — 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 — 도 함께 공격받는다. 따라서 공격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우리를 점점 죄어오는 경쟁 심화 교육에 맞선 투쟁 속에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라는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고사는 청소년에 대한 ‘테러’다

송재혁(전교조 교사)

이명박 정권의 청소년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과 10월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진행됐다. 일제고사는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원래 진단평가란 교사가 가르치기에 앞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일부를 표집해 시행하는 연구 목적의 평가다.

따라서 ‘일제고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권력 집단의 월권행위이며 청소년에 대한 권력형 ‘테러’다. 그들이 사용하는 ‘진단평가’니 ‘학업성취도평가’니 하는 용어는 일제고사가 가진 음모를 덮기 위한 기만적인 수사로서 대국민 사기극의 대본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은 이에 저항했다. 전국 수백의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일부러 결석했다. 이들이 교육당국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다.

시험 감독을 거부한 초등학교 교사

6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교육의 원칙을 지킨 공로로 한국 교육사에 그들의 이름을 길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진보운동 진영은 징계 대상 교사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무릇 ‘학력’이란 성적이 아니라 잠재력과 학습 동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제고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게 하고 열패감을 주며 학습 의욕

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습 자체에 혐오감을 주고 있다면, 이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제고사가 노리는 것은 학교의 학원화·시장화다. 모든 지역, 모든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단순 지식으로 서열화해 끝없이 경쟁시킨다. 비판적 안목과 창의적 사유를 몰락시키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자발적 압득을 더욱 강고히 하는 것이다. 돈과 더불어 교육이 인간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주요한 근거가 돼 간다.

이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면 일제고사 폐기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한다. 최근 수구단체들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다. 적반하장이다. 과연 누가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인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 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길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험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전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속시키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어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종가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국유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포럼

남부 지역사회포럼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합해야 할까?
연사_최영준
11월 7일(금) 오후 8시
서울교대 학생회관 2층 뒷마루
문의 010-8181-4800 / 참가비 1천 원

강원 지역사회포럼
미국 대선 — 오바마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연사_강철구
10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팔오광장 광장서점 2층 북카페
문의 010-9805-1050

인천 지역사회포럼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부활했는가
연사_이수현
1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인하대 9호관 514호 / 문의 010-5571-1917

대학 맑스주의포럼

고장난 자본주의, 케인스주의가 살릴 수 있을까?
연사_정병호
10월 29일(수) 오후 6시 30분
건국대 상허관 316호
문의 011-1731-2177
참가비 1천 원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동대문중앙 지역사회포럼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1-9987-3600
참가비 1천 원

성동광진 지역사회포럼
연사_김여진
1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여성능력개발원 3층 3강의실 (건대역 6번 출구)
문의 011-9038-0657
참가비 2천 원

강동송파 지역사회포럼
연사_김여진
10월 30일(목) 오후 8시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2-2271-2395



케인스나 맑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중부 지역사회포럼
연사_이상우
10월 29일(수) 오후 8시
임호빌딩 701호(종로5가역 2번 출구 이화예식장 옆)
문의 010-7326-3286
참가비 2천 원

서부 지역사회포럼
연사_강동훈
10월 31일(금) 오후 8시
신촌 아트레온 14층 토즈 (신촌역 4번 출구 2백 미터)
문의 016-785-4957 / 010-5232-1905
참가비 3천 원

경기남부 지역사회포럼
1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수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405호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저항의 촛불〉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들

-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 케인스냐 맑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맑스주의는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경제 위기의 시기, 노동계급은 승리할 수 있는가
- 7년째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학전
-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부활했는가
- 이명박 정권은 파시즘인가
-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합해야 할까?
- 왜 사회 변혁 정치 단체가 필요한가



《공산주의 선언》 출간 1백60주년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저항의 촛불》에 칼럼을 연재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수십 년간 그렇게 자주 되돌아보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 책은 《공산주의 선언》이 유일하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저술한 《공산주의 선언》(이하 《선언》)이 1백60년이라는 시간의 시련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현재성’ 때문일 것이다.

발간 1백6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 속에 《선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선언》이 묘사하는 세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낯익은 세계다.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동지를 틀어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해야 하고, 도처에서 연계를 갖춰야 한다.”

자본주의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북서 유럽 귀퉁이에 국한돼 있던 1848년에 이미 맑스는 오늘날의 세계를 정확히 예측했던 것이다.

《선언》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재발하며 점점 더 위협적으로 부르주아 사회 전체의 존재를 문제 삼는 상업공황 … 때에는 제조된 생산물들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생산력들까지도 오래 태반이 절멸된다. 공황 때에는 이전의 모든 시기에는 어불성설로 보였을 하나의 사회적 전염병이 돌발한다.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이 그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맑스의 공황론은 큰 영감을 준다.

또한, 맑스는 공황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은 실업의 위협과 노동소외, 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봤다.

맑스의 주장은 1848년뿐 아니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해당된다. 특히,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는 매우 실감있게 다가올 것이다.

한편, 《선언》은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

“부르주아지, 다시 말해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 즉 현대 노동자계급은 발전한다 …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노동자 계급)들을 생산한다.”

맑스와 엥겔스가 《선언》을 저술했던 1848년에 노동계급은 세계 인구 중 극소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도 1백60년 전의 세계 노동계급보다 더 큰 규모의 노동계급이 존재한다.

《선언》은 자본주의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자본주의 생산을 중단하고 사회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맑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힘이 사회주의를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1871년 파리코뮌, 1917년 러시아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1979년 이란 혁명 등에서 인상적으로 입증됐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선언》의 문구는 자본주의 위기와 모순이 격화하고 있는 오늘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더 절실한 것이 되고 있다.

저자들은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서 독자들이 《선언》에 개진된 타당한 원칙들을 그 시대의 맥락에 맞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시대를 앞서 미래를 예견한 맑스의 혜안이 번뜩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영준

《공산주의 선언》의 저자 엥겔스(좌)와 맑스(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당 해고 —

2차 해고에 2차 투쟁으로 맞선다



성향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해고 노동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나는 지난 10월 13일 두 번째로 해고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아 나를 해고했던 공단은 내가 투쟁의 승리로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를 자행했다.

그러나 공단의 처사는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나를 해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복직 시키도록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해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별정직 전환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단의 이번 해고 통보는 2년 이

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지침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이미 공단에는 내 뭍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나 있는 별정직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자신들이 내놓은 1년짜리 계약서에 내가 서명하지 않았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며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보복

그러나 나는 1년짜리 계약직이 아닌, 나로 인해 만들어진 별정직으로 전환돼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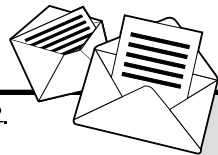
그래서 해고 통보받기 며칠 전, 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던 간담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별정직 전환을 요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나는 목을 조여 오는 듯한 압박을 견뎌

내며, 간담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던 중에 날아온 해고 통보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 내가 속한 공공노조가 별정직 전환요구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무자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도 공단 이사장을 면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내가 투쟁한 결과로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뜯어고치게 된 데 따른 ‘보복’으로 계약 만료일 이튿날 바로 해고를 통보했다.

나는 지난번처럼 다시 투쟁에 나섰다. 이번 싸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민주노동당, 공공연맹, 공공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역 촛불들, 강남서초노점상연합, 진보신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등이 힘을 보태 주고 있다. 공단 직원들의 응원도 더 늘어나서 큰 힘이 된다. 나는 곳곳이 싸워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10월 27일(월)까지 마감 일을 꼭 지켜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정태인 초청 포럼 후기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정태인 교수 초청 맑스주의 포럼 ‘미국발 경제 위기와 한국사회’가 열렸다. 정태인 교수는 최근 금융 위기를 낳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명쾌하게 논박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태인 교수의 말은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한 정태인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태인 교수는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에서는 수요는 지나치게 많고 생산은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상교육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획경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태인 교수가 묘사한 것처럼 구(舊)소련식 관료적 지령경제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구소련이나 현재 북한 같은 사회는 전혀 민주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았다. 핵무기를 만들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은 터무니없

이 부족한 북한을 봐도 알 수 있듯, 소련식 경제는 서방 자본주의와의 군사적 경쟁 논리가 압도하던 사회였다. 인민의 필요를 위한 계획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생산도 아닌 소외된 노동이 능동적일 리가 없다. 먹고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소외된 노동은 구소련식 사회와 마찬가지로 서방 자본주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소련 같은 사회가 아니라 ‘파레콘’ [참여경제], ‘협상조정모델’, ‘노동시간 계산모델’ 등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분배하는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는 지난 몇 년간 더욱 발전해 왔다.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생산을 계획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기술은 더욱 발달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서는 전 세계 차원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각각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생산할지 예상하는 것보다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를 예상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민주적 계획경제에서는 노동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기나 경쟁 때문에 무분별하게 과잉생산되는 낭비를 줄이고 현재 평균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일한다면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3시간이 채 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하루 6시간 노동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태인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혁명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며 노동자 중심주의를 표방한 맑스주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 1918년 독일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1974년 포르투갈 혁명, 68운동 등 모든 체제를 뒤흔든 운동에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나치를 낳기도 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노동자들의 투쟁도 낳은 것처럼, 이번 공황 하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 의문을 품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주의는 어느 때보다 더욱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선영

학내 동성애 억압에 제동을 걸다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 동아리 ‘변태소녀하늘을 날다(변날)’가 해마다 개최하는 레즈비언 인권 문화제는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자 축제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매년 보수 기독교 학생들과 동아리는 문화제를 방해했다. 올해도 무지개 걸개가 한밤에 사라졌다. 이것이 보수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의 소행임이 드러났으나, 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호소는 학생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레즈비언 문화제를 지지하는 수십 장의 대자보와 쪽지·서명이 이어졌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은 ‘변날’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도 많았다. 곧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싶은 사람들(대책위)’이 만들어졌다. 나를 비롯한 이화여대 ‘다함께’ 회원들과 대책위의 많은 학생들이 ‘변날’ 방어 운동에 참가했다.

결국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수 기독교 동아리 제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번 제명은 몇 년간 이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동성애 억압에 맞선 통쾌한 승리다.

보수 언론들과 지배자들은 항상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조장한다. 이명박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혐오 이데올로기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사람을 분열시킬 뿐이고,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기득권층이다.

동성애 억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도 있음을 보여 준 지지 메시지

나는 앞으로도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성지현

급진좌파와 극좌파

내가 <저항의 촛불> 9호에 기고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발족에 대해’란 글에서, 내가 보낸 원문은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 “다함께를 제외한 극좌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였다.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극좌파’가 ‘급진좌파’로 변경됐다.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석했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급진좌파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부상 이후 형성된 급진좌파의 기준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반대로 볼 수 있다. 이 진보정당들은 모두 급진좌파의 기준을 통과한다.

애초 내 서술은 노동자의힘이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의 극좌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김광일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항의 촛불> 9호에 실린 ‘노사협력’에 관한 물리뉴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물리뉴의 주장대로 회사가 주로 들먹이는 ‘경영난’은 노동 조건을 공격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IMF 패처럼 기업 자체가 파산해 버려서 그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도 노동자들은 투쟁할 때만 자신

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한다면, 노동자들은 그 기업을 국가가 인수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높은 자신감과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투쟁에 나서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작업장의 벽을 넘어선 연대가 결합된다면 거대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오동환

지금이 뉴라이트와 대화할 때인가

10월 20일, 뉴라이트 계열의 계간지 <시대정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런 기만적인 행사에 안타깝게도 주대환 씨,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주섭일 르몽드 디폴로마띠외 코리아 명예회장 등 진보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주대환 씨가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뉴라

이트와 이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은 촛불을 배신하는 행위다. 뉴라이트는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친북좌익세력’이라면서 탄압할 것을 부추기고 있고, 일제의 조선 강제 병합과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를 사실상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를 펴내려고 한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공생’이란 결국 나중에 뒤통수를 치려는 수작밖에 안 된다.

주동빈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뜨거운 연대에 매일 힘을 얻습니다”

다함께 회원 김어진이 강남성모병원 농성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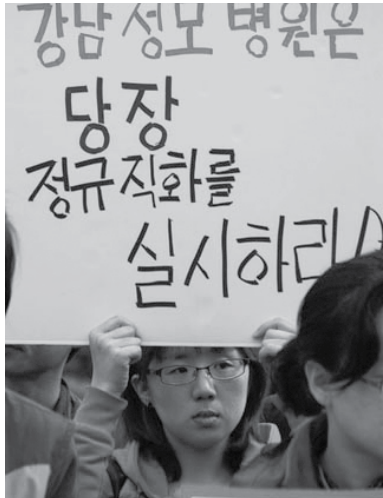
“농성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병원 측이 간호 보조 노동자들 28명을 해고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7백 명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동안, 새 병원 건물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새 병원 건물에는 VIP실이 있는데 60평 가량 되는 호화 병실도 있다더군요.

정말이지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면서 ‘성모’라는 말을 쓰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병원의 비정규직 동료들도 뭔가 힘을 느끼게 됐을 거라 봐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분들, 연대 단체 분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연대에 놀라고 매일매일 힘을 얻습니다.

기름 분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연대 대오의 힘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10월 6일 같이 일하던 수간호사들, 보안 직원들이 저희들을 로비에서 끌어냈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러나 연세대, 성신여대 분 들을 만

나서 승리 경험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 계층과 기업만 살리지 말고 노동자도 살리십시오.

부자만 살 수 있게 하는 정치,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법안 또 개악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국회의장 손목을 잡고 막아서라도 그 방향이 내리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비정규직 법안 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자기 발등 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의 연대가 가장 절실해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면 정규직도 결국 힘들어질 것입니다. 파업의 영향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강남성모병원 정규직지부가 우리의 버팀목이 돼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만 명이 우리 병원을 둘러싸고 함께 외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노조 통합 부결 유감

10월 1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를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이 다뤄졌다.

정규직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키자”고 가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한 지부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비정규직을 끌어안게 되면 우리 정규직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분열돼 있고 노조의 힘이 약화하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측의 공격에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노조를 통합하고 노조의 힘을 키워야 한다. 비정규직

을 정규직 노조로 조직하고 노조를 더 확대해 그 힘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다부지게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면 그 공정은 정규직 일자리가 되고 그것은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남을 뜻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지부 조합원으로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작업공정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 공정을 없애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전환배치 등을 통해 결국 정규직도 그런 공정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이미 정규직의 노동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힘들고 어려

운 공정을 없애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사측에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대의원대회가 별다른 논쟁 없이 노조 통합 안건의 부결로 끝나버린 뒤, 한 현장파 대의원은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단호하고 명확한 통합 찬성 주장이 있었다면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해 찬성 투표를 더 늘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올해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건설하지 못한 것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속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과 노조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기아차 화성공장

경제 위기 때도 이길 수 있다

지난해 기아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차종 이관 문제로 화성 3공장 조합원들이 지난 2주 동안 현장 파업을 비롯한 출근투쟁, 집회, 교섭장 연좌시위 등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화성 3공장에서 생산하던 오피러스 차종을 소하 1공장으로 이관하는 것은 화성 3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 3백여 명의 일거리가 사라지는 중대한 문제였다. 조합원들은 고용문제에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오직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 거짓말은 물론이고 소하 1공장 조합원들과 화성 3공장 조합원들 간 노노분열까지 조장했다.

그러나 19대 집행부는 집행부 임기가 끝나 가는 상황과 경제 위기에 대한 압력 속에서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기보다는 사측과 타협하려고 했다. 이에 분노한 3공장 조합원들은 야간조까지 80여 명이 남아 파업을 하며 교섭장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대의원 교섭 대표로 참여한 나는 교섭 석상에서 사측이 한 주장과 약속 위반 사항들을 실시간 보고·폭로하며 조합원들의 투지를 고무하려 했다. 그러자 사측 관리자는 나에게 ‘칼로 담가 버린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

10월 9일부터 시작한 파업과 연좌 농성은 계속 확대됐고, 3공장 전체 대의원들은 현장 공청회를 진행하며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이 싸움의 분수령이 된 10월 17일에는 3공장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3백50여 명이 모여 성공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결국 사측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차종 이관시 ‘인원문제와 제반 사항에 대해 현장 대의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꾸려 노사 합의’를 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번 투쟁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아차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우용(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연세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노학연대로 얻은 값진 승리

10월 16일,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고된 연세대 공대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 12명이 전원 복직했다.

노학연대 집회 4일 만에 값진 승리를 쟁취했다. 이것은 앞으로 학교 전체에 출입문을 무인화해 경비직 노동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타격을 줬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승리의 주체는 연세대 비정규직 노조와 수많은 학내 동아리, 학생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서대문 지역위원 등이 가입된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다.

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지지글로 빼곡하고, 서명운동도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동문회관에서 해고된 노동자 두 명의 체불임금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또, 과거 용역업체인 명신개발은 17년간 3억 5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5천만 원의 조합 발전금과 함께 노동조합에 지불한다고 약속하고도 지불여력

이 없다며 폐업해 버렸다.

그런데 명신개발은 3억 5천만 원을 연세대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다. 따라서 학교가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학생과 노동자가 연대해 재단 적립금 수천 억을 가진 부자 학교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 승리는 값진 경험이다.

김영중(연세대학교 학생)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저항의 촛불) 거리 판매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주세요.

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간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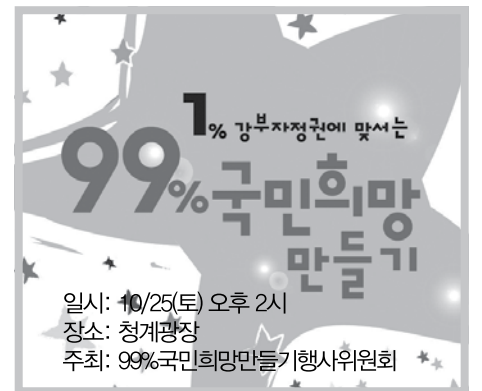
1년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기륭전자 노조 김소연 분회장 인터뷰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항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노동자들은 80미터 높이 15만 4천 볼트 고압송전탑 농성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천 일이 넘는 투쟁과 1백 일 가까운 단식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금속노조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을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는 정부·사측의 폭력 진압이 자행된 10월 20일과 21일 전인 10월 19일에 한 것이다.

4년간 투쟁을 이어 온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첫째 요구가 고용안정이었어요. 워낙 해고가 빈번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가 또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죠. 불법파견 판정이 났는데도 우리만 해고되고 회사는 겨우 벌금 5백만 원만 냈죠. 해고되고 가슴에 피멍 든 노동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일해야 하는 그 고통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죠. 또 여기 포기하고 탄 데 가도 똑같아요. 구로 공단에 파견근로가 아닌 곳이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었죠.

무엇보다 함께했던 동지들의 연대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 동지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죠.

촛불 항쟁은 기륭 투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구로역 CCTV탑에서 고공농성 할 때 정말 많이 느꼈죠. 지나가는 시민들이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투쟁 지지

금을 주시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공장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이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촛불이 커졌을 때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전면에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기륭이 ‘비정규직 — 일터의 광우병’을 처음 제기하면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티즌들도 함께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마음 아파서 왔다고 하면서 함께 울고 가고, 정말 감동이었죠.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것이 더 확산돼 다시 한번 항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죠. 분노하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죠. 결국 조직된 곳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조직된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더 많이 실천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기륭을 보세요. 94일을 단식하고도 해결이 안 됐지만 ‘너희가 노동자들 만만하게 대하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기륭 회사가 직원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해고는 필요하다’, ‘경쟁은 필요하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왔죠. 그런 팻말을 들었던 분들이 최근에 해고됐어요. 모두 고용안정 되려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1천 일 문화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정리할 생각이 아니었

어요. 기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두 손만 있어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충 정리 못 하겠다. 끝까지 해 보겠다’ 하고 결의했습니다.

촛불은 우리 경험이 다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어요. 거칠고 질서정연하지도 않지만 발전하고 있죠.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고 싸움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대세고, 첫술에 배부를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본은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조직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기세를 갖고 단결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죠. 이 문제에 힘차게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 정리 조명지

이명박과 기륭전자 사측의 천인공노할 폭력 탄압

해 김소연 분회장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위원장이 철탑 농성에 들어가자 10월 21일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절규하는 두 사람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렸다.

기륭전자 사측은 이 싸움에서 양보할 경우 전체 기업주들이 감당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물러서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경찰과 국정원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고 사측의 양보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기륭 조합원들은 미국에 있는 기륭의 최대 바이어인 시리우스 사에 원정 투쟁 가 있다. 1천 일 넘게 계속돼 온 기륭의 영웅적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전체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인하게 짓밟히는 지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서 전국적인 연대 파업 등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열사정신 계승!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사람은 결코
일회용품이 아니다”

일시 10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주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 전야제 25일(토) 오후 7시 기륭전자앞

10월 21일 연행되고 있는 김소연 분회장

10월 20일과 21일 기륭전자 사측과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기륭 노동자들에게 천인공노할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10월 20일에는 용역강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코뼈·이·다리가 부러지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항의